

통합 후폭풍 예고... 호남표심 세갈래 나뉠 수도

지방선거의 해, 정치지형 변화와 판세 영향

해가 바뀌면서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6·1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는 단연 '정치지형의 급변'이 꼽힌다.

전당대회를 거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성사되는지 여부와, 통합 과정에서 호남의원들의 집단이탈 여부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구도와 판세를 크게 출렁이게 할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으로선 바른정당과 통합 성공도 중요하지만 통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열음이나 이탈 의원들을 최소화하면서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의 관건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된 반통합파가 바른정당의 합당 과정에서 합류를 거부하고 별도의 결사체를 꾸리거나 무소속으로 호남지역에 후보자를 내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지형 변화와 함께 국민의당 통합과 또는 반통합과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서 지방선거에 나서지도 표심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새해를 맞는 호남지역 정치권과 지역민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호남지역 절대 다수 의원들의 반발을 뚫고 성공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당대회라는 마지막 난관이 버티고 있지만 국민의당의 대주주격인 안 대표의 뜻대로 바른정당과의 합당 작업은 늦어도 올 2월에는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양 당의 통합이 반통합파의 이탈로 인해 부분 통합에 그치는 경우다. 이 경우 통합정당이 호남지역의 표심을 얼마나 끌어 모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안 대표 입장에서 양 당의 합당은 국민 지지 확대 및 지방선거 승리로 가는 과정이지 합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게 안 대표 측의 얘기다. 이 때문에 통합정당이 올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3곳 가운데 단 한 곳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전국적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통합정당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물론 안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통합정당이 들어선다면 지지를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지를 회복은 지방선거 후보자로 나설 인물 영입과도 밀접하게 때문이다.

호남지역의 한 국민의당 의원은 "당 지지가 전국 지지율 10%(호남은 25~30%)선 정도로만 회복하면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대등한 경쟁 구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통합정당의 지방선거 선전 여부는 인물 영입과 함께 당의 정체성 설정과 그에 따른 정책 수립, 당의 집권 가능성 제시가 수반돼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합정당이 당 정체성을 중도개혁이 아닌 중도보수, 보수개혁으로 표방하는 순간 지방선거에서 호남은 필패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정치권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노선을 고집할 호남의원들이 호남지역에 후보자로 직접 나서거나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통합신당·호남의원 결사체

각자 후보 내고 치열한 경쟁 가능성

문재인 정부와 관계 설정 따라

선거 판도·지지율 영향 미칠 듯

이와 관련, 전남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당 의원은 "끝끝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호남지역 의원들이 별도의 정당을 꾸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기초의원 후보자를 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면서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가 이론적,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실행되기 위해선 지역민심의 지지가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문정부와 관계설정은 어떻게=국민의당 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 또는 통합반대표결사체가 문재인 정부와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민심은 문재인 정권 탄생에 호남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올 한해 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을 지켜보면서 약간의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호남 발전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에 표심을 분산시켜 경쟁 구도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인지 섣뜻 마음을 정하지 못한 지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호남SOC(사회간접자본) 증액,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광주 송정-목포)의 무안공항 경유 결정과 같은 굵직한 현안의 경우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선의의 경쟁이 없었다면 정치 쟁점화되거나 관철되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 정기국회 예산안 막판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등 제3당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의 모습을 본 지역민 상당수는 국민의당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아서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기본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안정적인 정당 지지율을 기반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호남이 힘을 모아 달라고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돼 신설 정당이 탄생한다면 이 경우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신설 통합정당이 호남은 물론 수도권, 영남권 민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만일 반통합파가 독립적인 결사체를 만들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 견제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지역민심을 얻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역민심도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표를 몰아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일각의 전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1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분산리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기·내용 대치...한국당 반대편 개헌안 국회 통과 요원

개헌투표 이뤄질까

제헌 70주년이 되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등 주요 대선후보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측근 비리와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극을 낳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하고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공약대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올 12월 개헌 실시' 주장으로 돌아서면서 국회 차원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 '몽니'=국회의 개헌 논의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과정을 갖고 연말께 개헌투표를 진행하고자 주장하고 나서면서 난기류에 휩싸인 상황이다.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6개월 연장,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뒤 그 결과를 가지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개헌

이 지방선거 이슈인 '정권 중간평가'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개헌에 대한 관심으로 진보 성향인 젊은 층이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한국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당에 공약 이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끝내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개헌 논의의 주도권은 청와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직접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국당의 동의 없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안 발의를 3월까지 한다고 하면, 2~3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은 데다 시대적 과제인 개헌에 반대했다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론 악화의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있다.

◇개헌 방향 이견=개헌 내용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도 크다. 권력구조, 선거제도, 경제민주화 조항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유

지한 4년 중임제를,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의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 2항을 더 강화하는 것을 놓고 민주당은 토지 공개념 도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헌법에 추가로 명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상법 등 하위 법체계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반대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 민주화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찬성하고 있지만 한국당 내에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개헌의 전제 조건인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도 이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현행 소선거구에서 탈피,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비례대표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호남 의석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눠먹고, 영남 지역에는 민주당의 진출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다당제를 더욱 고착화, 한국당의 입지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4호

첨단우리병원

어깨 통증과 손저림!
목 디스크일까요? 아니면 어깨 문제일까요?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시다면?
목디스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 메이저리그, 기아 타이거즈 **서재용 선수**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치료는
첨단우리병원!
 세심한 검사와 정밀한 진단으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